



■ 정부의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2019.3.1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 폭증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전무한 문제인 정부의 예견된 참사입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3월 12일(화)) 역대급 사교육비 폭증으로 교육 참사를 방조한 문제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분석 및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3년 연속 1인당 사교육비 최대치를 갱신한 29.1만원으로 조사됨.(2017: 27.2만원, 전년대비 1.9만원 증가)
- ▲ 이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총액(19.5조로 전년대비 8천억원 증가), 사교육 참여율(전년대비 1.7%p 증가한 72.8%), 학교급별 사교육비, 과목별 사교육비 어느 항목 하나 감소한 것이 없는 사교육비 폭증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교육 참사임.
- ▲ 오늘 발표된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임. 작년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은적인 고교체제 개선 등, 교육정책마다 심각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안고 있었기 때문임.
- ▲ 이렇듯 교육정책에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자명하고 박근혜 정부부터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신호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후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가 전무했던 문제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평가됨.

▲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 계획이란 게 이렇다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임. 잘못된 ‘대입제도의 안정적 추진’, 대체재 공급방식인 ‘방과후학교 활성화’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담보할 수 없음.

▲ 이번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다음의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특징①: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중학교가 가장 높았던 2017년과 달리 고등학교가 32.1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31.2만원, 초등학교 26.3만원 순이었음.

◎ 특징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폭을 보면 고등학교가 전년대비 3.6만원(12.8%)이 올라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1만원(7.1%), 초등학교 0.9만원(3.7%) 순이었음.

◎ 특징③: 전년대비 최대 증가치를 보인 고교의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영어가 7.7만원에서 8.8만원으로 가장 많은 1만원이 올랐으며, 수학이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9천원, 국어가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8천원, 예체능이 4.5만원에서 5.2만원으로 7천원, 사회·과학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천원 증가함.

◎ 특징④: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결과를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과 가장 높은 계층과의 사교육비 격차가 5.1배로 명확한 교육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음.

▲ 2018 사교육비 조사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분석①: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6만원이 오른 32.1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년 8월에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된 2019학년도 수능의 영향임. 따라서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 및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의 즉시 처방은 물론이고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함.

◎ 분석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9만원이 오른 29.1만원으로 폭증한 이유에는 고교체제 개선에 미온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한 몫 함. 중학교 사교육비도 31.2만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임. 또한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추진해야.

◎ 분석③: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영어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는 3천원으로 소폭 증가한데 반해 고등학교 1만원, 중학교 7천원으로 크게 오름. 이는 수능 영어 학습 부담이 주요 원인임.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실제 사용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절대평가 전환 취지와 달리 평가원은 모의고사·수능에서 어려운 영어 기조를 유지. 절대평가 취지 및 교육과정 준수하는 수능 출제 개선이 시급함.

◎ 분석④: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관련, 학교수업 보충(49.0%)을 1위로 응답한 상황을 볼 때, 대입에서 영향력이 커진 고교 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됨. 따라서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및 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 등이 시급)

▲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함. 더불어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에 즉각 착수해야 함.

▲ 2019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인 점과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응 계획을 고려할 때 내년 사교육비도 폭증이 우려됨.

▲ 문재인 정부는 이 역대급 참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교육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속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함. 현 정부가 작년처럼 침묵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 우리는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현 정부가 미봉책에 그치거나 납득할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비상 행동을 전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임.

참으로 비극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전년대비 1.9만원으로 폭증하여 사교육비를 조사한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역대급 사교육비 폭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전무했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대입 정책 등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의 예견된 참사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핵심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중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1만원으로 집계,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7.2만원을 또 다시 갱신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7.0%, 1.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2천원, 3천원 오르는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 1.2만원이 올라 25.6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전 정부와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2017년 사교육비는 2016년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 전년대비 1.6만원이 오른 27.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단위:만원)



[표1] 역대 정부의 1인당 사교육비 전년대비 증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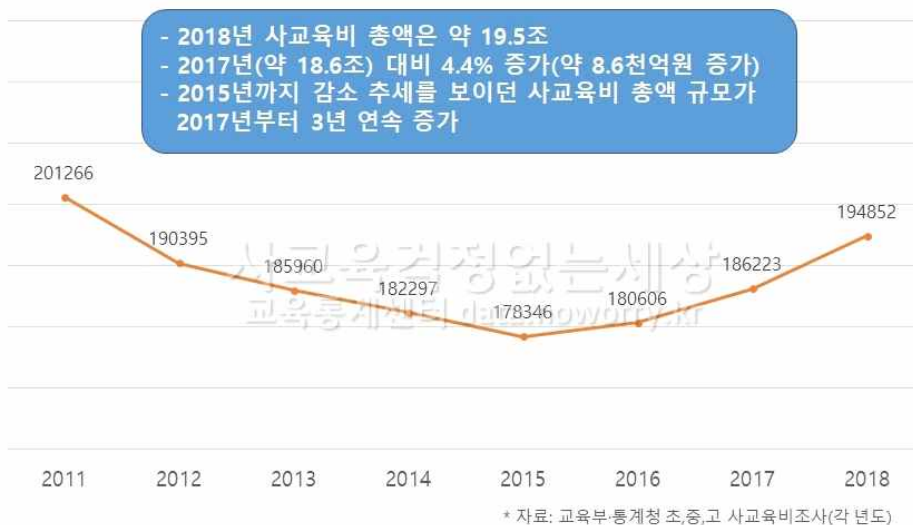
단위(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증감	1.1(+)	0.9(+)	0.2(-)	0	0.4(-)	0.3(+)	0.3(+)	0.2(+)	1.2(+)	1.6(+)	1.9(+)

이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총액도 19.5조로 전년대비 4.4%(8천억원 증가)가 증가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1.7%p가 증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학교급별 사교육비, 과목별 사교육비 어느 항목 하나 감소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폭증 대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교육 참사가 일어난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2] 사교육비 총 규모 연도별 추이

사교육비 총 규모 추이(단위:억원)



오늘 발표된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입니다. 이전 정부부터 사교육비 폭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외에도 작년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온적인 고교체제 개선 등,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육정책에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자명하고 박근혜 정부부터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신호가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가 전무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참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렇다 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작년에 확정된 대입제도가 낳은 부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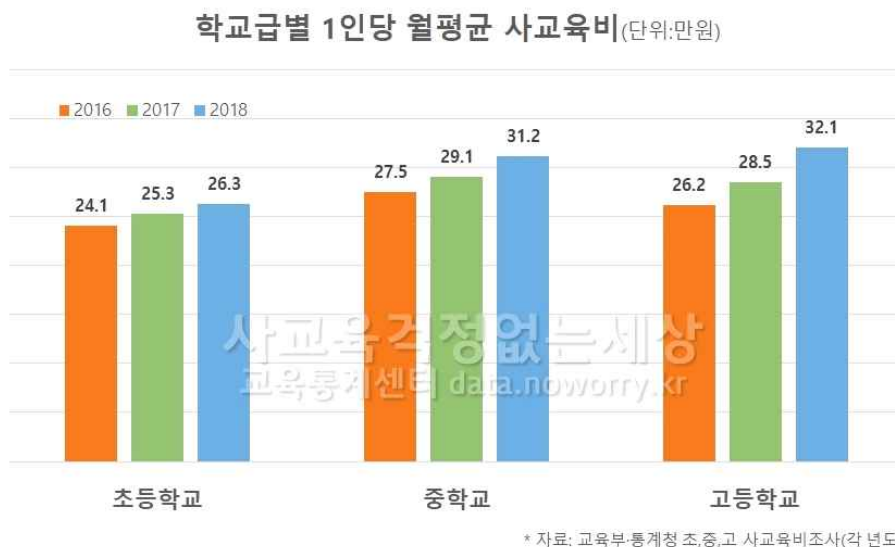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잘못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사교육 상품 대체제인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입제도 및 고교체제 개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교교육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지 않고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징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지출이 가장 많았던 전년도와 달리 고등학교가 32.1만원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중학교 31.2만원, 초등학교 26.3만원 순임.**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32.1만원, 중학교 31.2만원, 초등학교 26.3만원으로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작년에 비해 교육 현상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대입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사교육비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예체능 사교육도 4.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전년대비 7천원 올라, 예체능 입시 대비를 위한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급별 비교(2016년-2018년)



■ **특징②: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폭을 보면 고등학교가 전년대비 3.6만원(12.8%)이 올라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2.1만원(7.1%), 초등학교 0.9만원(3.7%) 순이었음.**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을 보면 초등학교는 25.3만원에서 26.3만원, 중학교는 29.1만원에서 31.2만원, 고등학교는 28.5만원에서 32.1만원으로 각각 1만원, 2.1만원, 3.6만원이 올라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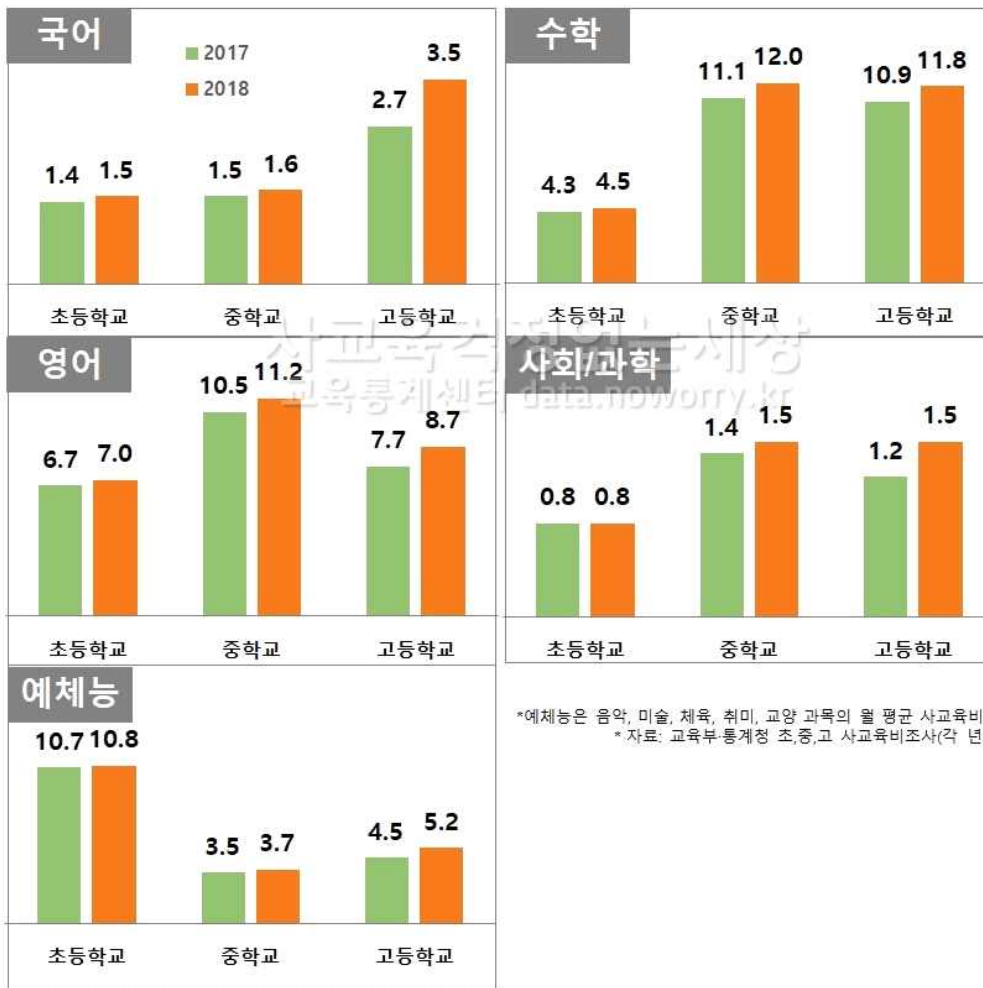
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폭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3.6만원으로 가장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간의 초중고 사교육비 증가세도 고교가 5.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중학교 3.7만원, 초등학교가 2.2만원 순입니다. 즉 전년대비 수치는 물론이고 3년간의 통계를 보아도 고교에서 사교육비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 특징③: 전년대비 최대 증가치를 보인 고교의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폭 보면 영어가 7.7만원에서 8.8만원으로 1만원이 올라 가장 높았음. 수석이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9천원, 국어가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8천원, 사회·과학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천원 증가함.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폭증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영어는 7.7만원에서 8.8만원으로 1만원 올랐으며, 수석은 10.9만원에서 11.8만원, 국어가 2.7만원에서 3.5만원, 사회·과학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1만원, 9천원, 8천원, 3천원씩 올랐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사교육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4]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2017년-2018년)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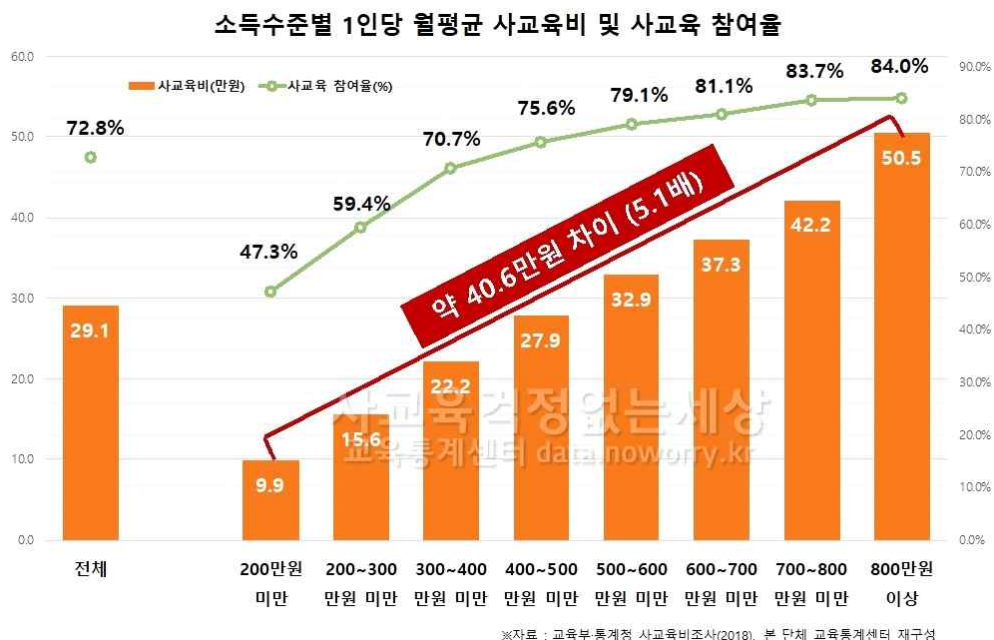
[그림5] 일반교과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 **특징④**: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결과를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과 가장 높은 계층과의 사교육비 격차가 5.1배로 명확한 교육 양극화가 확인됨.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200만원 미만)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9만원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800만원 이상)은 50.5만원을 지출해 그 격차가 5.1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교육 양극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림6]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분석①: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6만원이 오른 32.1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년 8월 확정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불수능 수능의 영향임. 따라서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학종 개선 방안 및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의 즉시 처방은 물론이고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함.

고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작년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부터 이어져온 불수능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4월 교육부 박춘란 차관이 대학에 요구한 정시 확대 기조를 시작으로 대입 공론화 과정 및 대입제도 확정까지 일관된 정시 확대 기조로 인한 수능의 영향력 강화 신호가 수능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킨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8월에 발표한 대입제도에서 학종 개선안도 수상경력 과 같은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도 해소하지 못하는 미흡한 방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 2017학년도부터 흐름이 유지된 불수능 분위기는 수능 사교육 시장에 불을 지피고 고교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학종 개선 방안으로 수상경력·자기소개서·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의 수능 개선안이 즉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시 처방으로는 사교육비 경감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는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분석②: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9만원이 오른 29.1만원으로 폭증한 이유에는 고교체제 개선에 미온적인 정부의 움직임이 한 몫 함. 중학교 사교육비도 31.2만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임. 또한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음.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추진해야.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9만원이 오른 29.1만원으로 폭증한 이유는 잘못된 대입제도 확정의 영향이 고교체제 개선에 미온적인 정부의 움직임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9.1만원에서 31.2만원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그대로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교육비 증가 요인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 체제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고입 과정에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분석③: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영어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는 3천원으로 소폭 증가한데 반해 고등학교 1만원, 중학교 7천원으로 크게 오름. 이는 절대평가 취지와 달리 난이도가 올라간 수능 영어 학습 부담이 주요 원인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오른 영어 과목의 경우 초등학교는 3천원으로 소폭 증가한데 반해 고등학교는 1만원, 중학교 7천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수능 영어 학습 부담이 주요 원인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그 취지를 ‘수능 시험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실제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능 영어 1등급이 10% 정도 나오게 되면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상위권 학생의 사교육 부담도 해소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응시생의 10.03%가 1등급을 받아 도입 취지가 실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림7]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

- 수능영어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는 단순히 높은 수능 점수를 받기 위한 학생과 학교현장의 무의미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활성화 등 학생들의 실제 영어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자료: 교육부

하지만 평가원이 실시한 2019학년도 수능 모의고사부터 난이도를 급격하게 올려 1등급 학생이 4.19%가 나오게 되자 ‘영어 절대평가는 어렵다.’는 도식이 성립되면서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2019학년도 수능 채점자료를 보면 실제로 영어 1등급 비율이 5.30%로 수학 1등급 비율(수학 가형 6.33%, 수학 나형 5.98%) 보다 낮습니다. 절대평가가 되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영어가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당연히 영어 사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취지에 맞는 출제 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표2] 영어 절대평가 전환 이후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영어/수학 1등급 비율**

구분	영어	수학가형	수학나형
2018학년도 수능	10.03%	5.13%	7.68%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	4.19%	4.17%	5.81%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7.92%	7.57%	4.74%
2019학년도 수능	5.30%	6.33%	5.98%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및 모의고사 채점결과 보도자료 재가공

■ 분석④: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관련, 학교수업 보충(49.0%)이 1위로 응답한 상황을 볼 때 대입에서 영향력이 커진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됨. 따라서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내신 절대평가 도입 및 학교수업과 평가 혁신 등)

사교육 수강목적에 대한 응답 에서 학교수업보충이 49.0%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입에서 고교내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도는 높아졌고 지식암기 중심의 수업과 오지선다형 평가 방식이 여전한 고교의 상황을 볼 때 기출문제 풀이 중심으로 사교육기관에서 학교시험을 대비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과 사교육기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없도록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함. 더불어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에 즉각 착수해야 함.

2018년 사교육비 총 규모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비, 어학연수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부 개념(범위)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가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2019년 조사결과 발표부터는 위의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7년에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통해 2018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유아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조사 실시 이후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본조사를 실시해 증가세로 평가되는 영유아 사교육비의 실체를 파악하고 유아를 둔 가정의 가계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아 단계의 조기 교육이 점점 연령이 내려가는 폐해를 막기 위해 조사범위 또한 유아(만3-5세)뿐 아니라 영아(만0-2세)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해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폭증은 분명히 예견된 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사교육비 신호는 곧 가계 부담이라는 국민 고통임을 문재인 정부가 인식했다면 출범 직후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수방관했습니다. 급기야 대입제도 등 사교육과의 영향 관계가 깊은 교육 정책마다 사교육 유발 요

인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언론은 “정부와 사교육 연애하나요?(중앙일보, 2018.28.)”라는 기고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폭증 원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제공한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MB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규명된 사교육 대체제를 공급하는 방식인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대책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몹시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역대급 사교육 폭증 대란 사태를 맞아 교육부가 내놓은 대응계획으로는 2차 사교육비 폭증 사태가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참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2019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점과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여전히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 발표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도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속히 △학종 개선 및 수능 출제 개선을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선 정책의 적극적 추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 전형 및 교육과정 개선, △고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등의 사교육 유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관련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현 정부가 지금처럼 미봉책에 그치거나 납득할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비상 행동을 전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엄히 경고합니다.

## 2019. 3.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분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